



## 한국사회 미래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 방법론: 변화의 윤곽 포착하기
- ▶ 어디서, 어떻게 변화의 신호를 읽을 것인가?
- ▶ 사회혁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중심 키워드

### 1. 방법론: 변화의 윤곽 포착하기

정확한 '인과관계' 보다는 '상관성'과 '패턴' 찾아내기

- 전환기에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번덕스러운 여름에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대규모 지진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여진을 제대로 예측하여 그곳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보다도 더욱 무모할 수 있음. 왜냐하면 사회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은 자연의 변화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무수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기 때문.
- 특히 사회는 자연과 달리 사람이 행동에 의해 변하게 된다는 결정적 차이

가 있음. 즉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예측이 다시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결국은 당초의 예측을 벗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명절 기간에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도로를 교통방송이 안내해주면, 조금 후에 많은 차들이 그 도로로 몰리고 결국 그 도로는 교통방송의 안내와 달리 다시 혼잡해지는 원리와 같음.

-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전환기의 사회변화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확한 공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소 거칠더라도 큰 흐름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기의 격변기에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케인스는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략 맞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be roughly right than precisely wrong.)”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전환기에는 기존공식에 의한 정확성 추구보다는 틀을 깨면서 현실을 그대로 보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줌.
- 현재 시점에서 일상 속에서 변화의 모티브를 찾거나 사회 변화의 방향을 예상해내는 것이, 기존 과학에서 규범이 되어왔던 객관적 엄밀성이나 정확성 보다는 일종의 ‘근사치’로 접근해보는 방법일 수 있을 말해줌. 여기에서 시도한 오픈랩(Open Lab)방식은 이처럼 생활인의 직관에서 변화와 미래의 암시를 찾아보자는 취지아래 수행된 방법론임.

오픈랩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혁신의 단서를 포착하고 전략화 하려는 시도

- 더욱이 최근에 주목받는 두 개의 학문, 기술 영역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인과 관계 찾기 보다는, 거칠더라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관성과 패턴’을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음을 예시함.
- 우선, 1990년대부터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넘어 사회과학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복잡계 과학은,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효과 등에 의해 초기 값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음. 그 결과 사회에 대한 단순한 균형공식에 따라 사회를 정확하게 재단하려는 시도는, 오직 맑은 날씨만이 계속되는 시기에만 기상예보를 하고 전혀 폭풍우를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 예보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함.

- 물론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고, 복잡계 이론은 ‘패턴’의 발견으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지진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과는 별개로 지진은 놀라운 정도의 통계적 단순성과 질서, 즉 패턴을 따르는데, 그 패턴이란 “더 강력한 지진은 항상 더 약한 지진보다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지진의 수가 지진으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제공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sup>48)</sup>
-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산불과 태양 홍염, 화석 기록이 보여주는 종의 멸종기록, 그리고 새 개체수의 변동에서 비슷하게 불규칙하지만 매우 체계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그 패턴은 대기와 기후의 동역학에도 나타난다.”<sup>49)</sup>
- 비슷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체스게임 고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일반적인 패턴들을 모두 꿰고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뛰어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 미리 발생할 확률을 예상하는 것이 아님. 즉, 그들은 경험으로 각 패턴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함.
- 요약하면, 지금처럼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와 사회 변동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장을 나타내는 이론이 절대로 우아한 몇 가지

48) 마크 뷰캐넌(2013) 『내일을 위한 경제』, 사이언스북스

49) 에릭바인하커(2006),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

공식들만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나 날씨를 이해할 때와 같이 근사적 용법을 사용해야 하고, 적당히 갈끔하지만 단점이 있는 모델을 다루어야 하며, 그리고 매우 혼란스럽고 변덕이 가득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sup>50)</sup>

- 둘째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이론은 정교한 ‘샘플링 데이터’ 분석 보다는 거친 ‘전체 데이터 분석’이 훨씬 객관적 현실에 더 부합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즉,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를 가진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다.”는 것임.
-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탄탄한 상관성과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조사 데이터와 확실히 구별됨. 즉 빅데이터는 사회와 사건의 정확한 인과성(causality)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광범한 영역과 이질적인 관계에서의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상관성(correlation)과 일정한 패턴(pattern)을 보여주게 됨.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의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다.

- 결국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수학을 적용하여 확률을 추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비인과적 분석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느린 인과적 사고보다도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틀이 되고 있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숫자들은 스스로 입을 연다. 페타바이트는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한다. 상관성이면 충분하다.”<sup>51)</sup>
-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패턴이 가진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는 구글이 선보였던 ‘미국 내 독감발생 추이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 질병관리국(CDC) 역학 예방팀은 독감 예측을 위해 통상 3000여

50) 마크 뷰캐넌(2013) 『내일을 위한 경제』, 사이언스북스

51) 빅토어 마이어 외(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 북스

개 진료소, 3000여 명의 외래 진료환자 진단의사, 122개 도시의 인구통계 사무소, 각 주 보건국 관계자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동원하는 거대한 작업을 수반함.

## 독감 트렌드 - 미국

독감 유행 수준을 파악할 때 검색어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Google 독감 트렌드는 집계된 Google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감 유행 수준을 예측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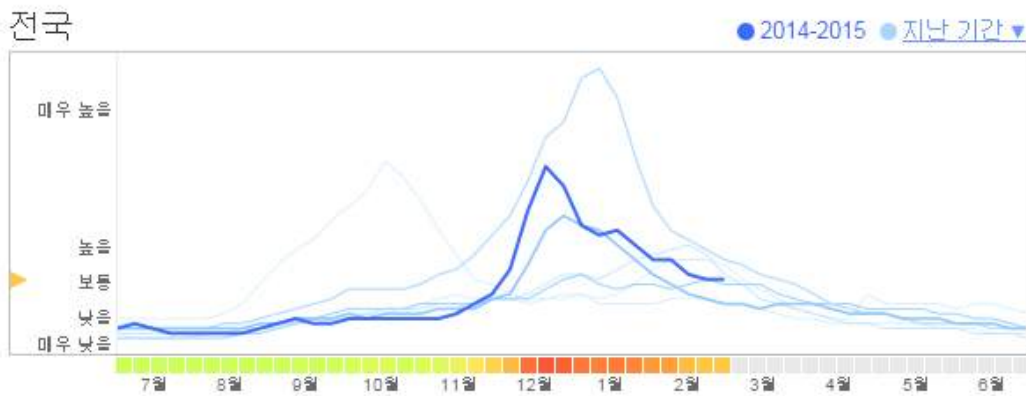


그림 4-1: 구글 독감트렌드로 분석한 계절별 미국 독감발생 추이 예시

- 그런데 구글은 자신들이 보유한 검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사용자들이 평상시 사용한 검색어들 가운데 독감 징후와 관련 있는 검색어를 추출함으로써, 미국 질병관리국이 예측한 독감추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유도해내고 있음.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구글이 온라인 쇼핑거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 물가지수를 공개하는 구글 물가지수(Google Price Index)임. 각 국가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역시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고 있음.)
- 사회혁신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오픈랩(Open Lab)방법은, 가능한 다수의 생활인과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가능한 많은 의견을 끄집어내며, 가능한 다양한 기법의 토론방식을 동원함으로써 거칠더라도 현실에 근접한 변화의 움직임과 동향을 읽어내려는 시도임. 즉, 기존의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포착이 어렵고, 기존의 통계숫자로도 잘 잡히지 않는

현실 생활 속에 잠재된 미세한 변화의 체험과 느낌을 감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게임의 환경이 바뀌면 게임의 규칙도 바뀔 수 있다.

- 21세기에 진입한지 벌써 15년이 지난 지금, 경제, 사회, 자연 환경, 인구라고 하는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기존의 틀과 규칙을 흔들지 않고 관성적으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변화의 계기를 놓치게 될 확률이 매우 큼. 사회혁신의 움직임 포착하기 위한 단서의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틀과 제도, 규칙 역시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임.

THE CURRENT RULES	REWRITING THE RULES
More market power, less competition	Make Markets Competitive
The growth of the financial sector	Fix the financial sector
The ‘shareholder revolution,’ the rise of CEO pay, and the squeezing of workers	Incentivize long-term business growth
Lower taxes for the wealthy	Rebalance the tax and transfer system
The end of full-employment monetary policy	Make full employment the goal
THE stifling of worker voice	Empower workers
The sinking floor of labor standards	Expand access to labor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Racial discrimination	Expand economic security and opportunity

표 4-1: 루스벨트 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의 목차

-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개혁성향의 미국 루스벨트 연구소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앞세워 경제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이름이 경제의 규칙을 다시 구성하자는 뜻에서 “Rewriting the rules on the American Economy”. 바꾸어야 할 지금의 8가지 경제 규칙을 열

거하고 대안으로 바뀌야 할 새로운 8가지 경제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sup>52)</sup>

- 규칙을 바꾸려는 발상의 전환은 경제 시스템처럼 비단 거대한 제도개혁에만 국한되지 않음. ‘여건이 바뀌면 규칙도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은 변화를 향한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최초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사회적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답.
- 즉, 죄수의 딜레마나 집단행동에서 무임승차 발생 모델이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고정시킨 제약조건을 마치 실제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죄수의 딜레마 속의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 주어진 제약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연자원의 이용자들은 죄수들과 다르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제약조건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공유자원의 사용자가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가차 없는 비극’이 아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sup>53)</sup>
- 현재 단계에서 사회혁신은 많은 경우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금처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환경적 전환이 중첩되어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작동해왔던 틀과 규칙들을 의심해보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기존의 틀과 제도, 규칙으로 쉽게 재단하거나 제약하려는 관행에서도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음. 물론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시민과 합의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야 함.

52) <http://www.rewritetherules.org/>

53) 엘리너 오스트롬(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 하우스

## 2. 어디서, 어떻게 변화의 신호를 읽을 것인가?

비선형적 사고 - 세상은 절대 평형상태로 고요하지 않다.

-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세상은 변덕이 심한 폭풍우 속의 날씨와 같음. 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음.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음. 우리는 이런 환경에 직면해서 사회혁신의 단초들을 발견해야 내야 함.
-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비선형성에 대해서 복잡계 과학은 훌륭한 설명을 제공해줌. 예를 들어, 경사와 용기, 능선 같은 부분들이 널려있는 난코스에서 골퍼가 퍼트를 할 경우, 그 볼의 출발 지점이나 스윙 각도, 힘 등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공이 날아가는 위치는 점점 벌어져서 결국 완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이처럼 “비선형성은 초기 조건상에는 조그만 차이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경우 명확히 나타남.<sup>54)</sup>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사회 변화의 수많은 변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변화의 비선형성은 경로 의존성, 즉 과거 역사적 궤적의 차이에 따른 미래 변화의 큰 차이를 잘 설명해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945년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역동적이고 예외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에 관한 화두를 던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1퍼센트의 성장률이 가지는 '상당한 의미' 강조한 바가 있음. 그는 경제가 매년 1퍼센트씩 성장하면 한 세대(30년) 후에는 누적 성장률이 35퍼센트에 이르게 되고, 매년 1.5퍼센트 성장을 하게 되면 50퍼센트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정도의 성장은

54) 에릭바인하커(2006),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



세대 사이에 중대한 생활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나간 것과 같은 경험의 차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런데 매년 평균 1.5퍼센트 이상의 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20세기라는 대단히 예외적인 시기에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지적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퍼센트 전후를 넘나드는 성장률, 1990년대 약 8퍼센트 내외, 그리고 이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에도 대략 5퍼센트 전후 성장률을 경험했음. 그 결과 동아시아의 식민지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규모 15위의 OECD국가가 되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 없는 사례를 만들어 냄.
- 결국, 우리의 지난 수 십 년 역사는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이며, 30년을 주기로 한 한 세대 격차는 고사하고 10년 단위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줌. 이런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세대 차이는 시간대별 경제적 격차의 급변에 따른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런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리고 이에 따라 물질적 삶의 방식이 적어도 10년 단위로 완전히 바뀌어왔음은 물론, 이를 반영하여 가족환경, 교육제도, 복지제도, 사회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는 것을 말해줌.
-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성장률의 빠른 하락, 거대한 인구변화의 시작, 부동산, 주택 등 생활환경의 구조적 변화 조짐 등 미래의 변화 역시 과거에 못지않게 역동적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경로의존성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기도 함.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사회와 우리생활의 미래 변화를 비선형적으로 상상하고 가정해야 함.
- 특히, 세계적으로 특별한 고속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지금까지의 직선적인 발전 패턴과 다르게, 미래의 한국사회는 '순환'적 개념이 중요해 보임. 그리고 많은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순환'의 기능과 프로세스를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귀착될 것. 단지 천연자원이나 에너지의 성공적인 순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일자리, 주택,

교육에까지 그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고 방식과 태도에서도 순환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고민해볼 수도 있음.

시장을 포함한 경제, 경제를 포함한 사회, 사회를 포함한 지구

- 사회혁신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각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공간들은 대체로 시장과 경제, 경제와 사회, 인간사회와 지구자연이 될 수 있음.
-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경제의 일부에 불과한 시장의 원리로 사회전체가 조직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을 가장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유명함. 그는 “경제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조직을 압도해 버릴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다. 이것은 사회가 시장에 딸린 부수물로서 운영되게 된다는 엄청난 사태를 뜻한다. 경제가 여러 사회관계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회관계가 경제체제 안에 묻어 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sup>55)</sup>
- 지난 30여 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과도하게 신뢰한 나머지, 통상적인 경제영역은 물론 교육, 건강, 공공재 영역까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재조직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실제 목도하기도 했음.
- 또한, 생태경제학의 화두를 열었던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이미 한참 오래전인 196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를 닫힌 우주선으로 비유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경제 시스템을 강조한 바가 있음.<sup>56)</sup>
- 그에 의하면 외형적으로 기업은 서로 피의 경쟁을 하며 서로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라

55) 칼 폴라니(1942),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56) Kenneth E. Boulding, (1966),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

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완전히 반대로) 닫힌 시스템이 아닌 오픈 시스템이라는 점을 간파했음. 즉 경제가 정치나 문화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연으로부터 계속 원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고,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를 자연 속에 배출해야만 함. 즉 경제는 '사회의 일부부분' 이면서, 나아가 인간 사회가 '자연의 일부부분'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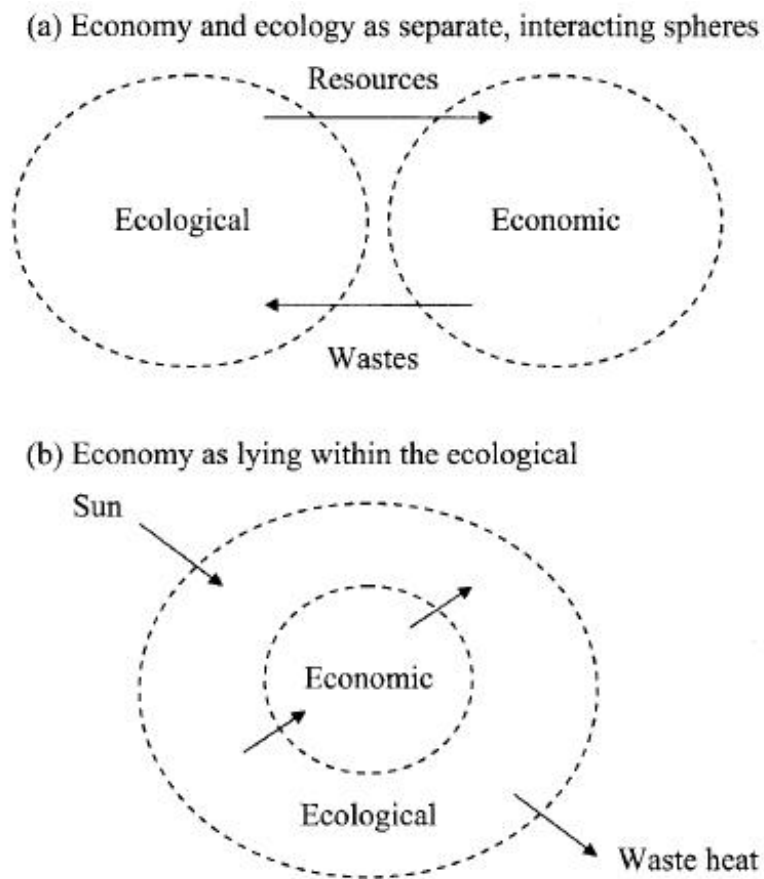


그림 4-2 :경제와 생태의 관계(출처: Richard P.F. Holt edited(2009), 『Post Keynesian and Ecological Economics』 )

-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오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자연,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의) 닫힌 시스템이라는 것이 불당의 핵심주장이자, 환경에 대한 고민의 대전제. 이는 지구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공급받

을 수 없고 지구에 필요 없는 것들을 지구 밖으로 버릴 수도 없다는 의미. 그래서 불당은 지구를 우주에 떠 있는, 인구수와 자원사용, 쓰레기처리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주선 지구’로 가정한 것임.

- 닫힌 시스템은 통상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른다고 알려졌음. 이는 지구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가역적 변화가 아니라 혼잡도(엔트로피)가 일관되게 높아가는 쪽으로만 변화가 진행되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같은 유한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나 자동차 운전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100% 화석연료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뜻이고, 배출된 쓰레기는 계속 쌓일 것이고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임.
- 즉, 사용 가능한 자원을 소모하여 쓰레기 상태로 변화한 자연현상이나 물질의 변화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자연의 자신의 잠재력이 소진되는 방향으로만 변화하게 된다는 뜻. 만약에 우리 지구가 닫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 세상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변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 변화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우선 그렇다.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일까.)

경제의 다원성, 생활의 다원성(Pluralism)을 수용하자.

- 이념과 생각의 다원주의는 그 동안 널리 퍼졌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과 생활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았음.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경제는 전형적인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이거나 극단적인 시장 지상주의적 경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 경험과 경제 시스템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사이의 잔여적 공간(residual space)이 아

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의 통합적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sup>57)</sup>

- 어떤 면에서 다원적 경제(pluralist economy)가 다원적 정치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함. 예전에는 혼합경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흔히 썼지만,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 도식에서 일종의 과도기를 표현한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임. 사실 경제의 다원성은 우리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주제.
- 그 사례의 하나가 '경제학의 다원주의를 위한 국제학생 이니셔티브(the International Student Initiative for Pluralism in Economics (ISIPE))'임. 2014년 30개 국가 65개 학생그룹들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2015년 현재 80여개 학생그룹이 참여한다고 알려짐.<sup>58)</sup> 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육이 지독히 편협한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제한되어왔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에서 경제학이 심각하게 무력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대안을 찾는데 고전하고 있다는 성찰의 결과임.
-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과 문화, 정치가 지극히 편협하게 쏠려 있는 것 이상으로, 경제 시스템도 재벌 반경 아래 있는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 불안한 금융시스템, 수출의존형 시스템 등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결함이 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어렵게 하고, 위기의 시점에서 완충지대를 찾을 수 없게 하며, 미래를 향한 싹을 발견하기 힘들게 함.

유토피아적 상상력, 긴 호흡으로 미래를 상상하자.

- 사회혁신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다른 방식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관례적 방식을 벗어난 솔루션 찾기를 지향함.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57)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58) <http://www.isipe.net/>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함. 오픈랩(Open Lab)을 개최하면서 슬로건을 “일상, 이상, 상상”으로 정했던 것도 이런 취지였으며 최근 소셜 픽션 방식의 상상테이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며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했던 토머스 모어는, 이미 1516년 시점에서 여섯 시간 노동으로만 살아가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꿈꾸었고 이는 5백년의 역사적 시간이 흘러간 지금에도 대단히 훌륭한 공감을 주고 있음.
- “유토피아에서는 평일의 경우 하루에 총 여섯 시간을 일합니다. 오전에 세 시간 일하고 점심을 먹고 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세 시간 더 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빈둥대거나 방종한 일에 탕진하지 않고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유 시간을 교육을 더 받는데 소비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익 강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sup>59)</sup>
- 더 나아가 토머스 모어는 여섯 시간 노동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놀지 않고 모두 노동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덧붙여 지금 어법으로 볼 때 소박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는 지금의 시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높은 대목인데, 이처럼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 역시, 1929년 대공황의 급박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에 몰두했다고 하는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달리 - 1백년 후의 인류의 경제를 상상하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한 사례가 있음. 그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다는 가정아래, 나는 1백 년 안에 경제 문제가

59) 토머스 모어(1516), 『유토피아』, 펭귄 클래식 코리아, 124~125쪽.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는 곧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경제 문제가 인간의 영구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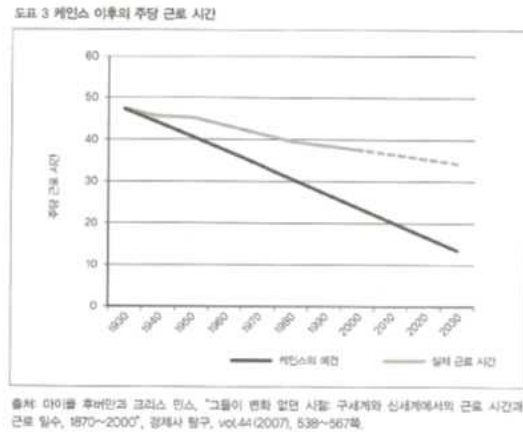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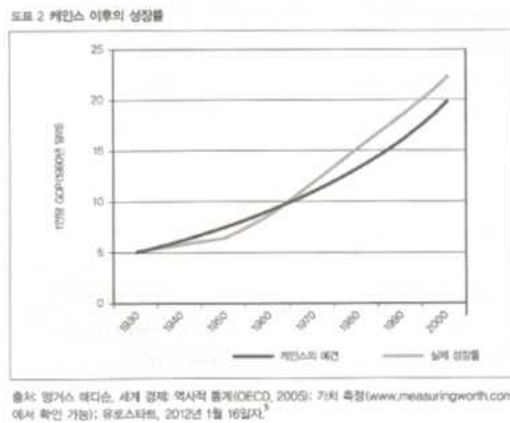


그림 56-3 : 케인스의 경제 예측과 실제(출처: 스킨스키(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 로버트 스킨스키가 실제로 케인스의 예측을 검증해본 결과, 1930년대에 비해서 현재는 4~5배 부유해져 대체로 예측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평균 노동시간은 그 때보다 단지 15퍼센트 정도 줄어들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남. 이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은 일을 즐기기 때문이거나, 그만큼 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나,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현재의 불평등 논쟁은 두 번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
- 또한 세 번째 원인과 관련하여 케인스는 인간의 욕구는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가 있음을 구분하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 낮고 싶어 하는 상대적 욕구는 만족을 모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절대적 욕구는 어떤 시기에 이르면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리고 그 지점에 사람들이 도달하면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돈벌이가 아니라 비경제적인 목

60) 존 메이너드 케인스(1930), 『설득의 경제학』, 부글, 198~218쪽.

적에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상상했음.

- 케인스는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단계에 오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걱정에서 풀려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과학과 복리가 안겨줄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미래를 상상함.
-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의연히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과 실업,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시점에서 온갖 비관적인 미래 전망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려면 케인스와 같은 긴 호흡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임.

### 3. 사회혁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중심 키워드

- 2014.10~2014.4 기간을 통하여 9개 오픈랩(OpenLab)에서 약 350여명의 생활인,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문제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사회혁신의 단서들을 종합하였음. 즉, 사회혁신이라는 렌즈로 우리사회의 문제, 문제를 푸는 솔루션,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관찰하고 숙고하며 상상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핵심 맥락: 변화의 중심에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가 있다.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거대한 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객관적인 기술 혁신이나 경제 사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임. 사물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과거에는 변화를 구상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구조(개인 - 가족 - 직장 - 지역 - 국가)라는 틀이 의연히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이 관계에 의지해서 객관적인 사회문제(일자리와 교육, 주거, 보건, 기후 변화 등)에 대처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나와 내 주위의 관계(집단) 자체가 변화의 한복판에 있고, 여기가 문제와 변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기존 혈연가족의 해체나 1인 가구의 주류화 등은 전통적인 가족 의존형 가구적 복지 체제의 해체와 함께 광범하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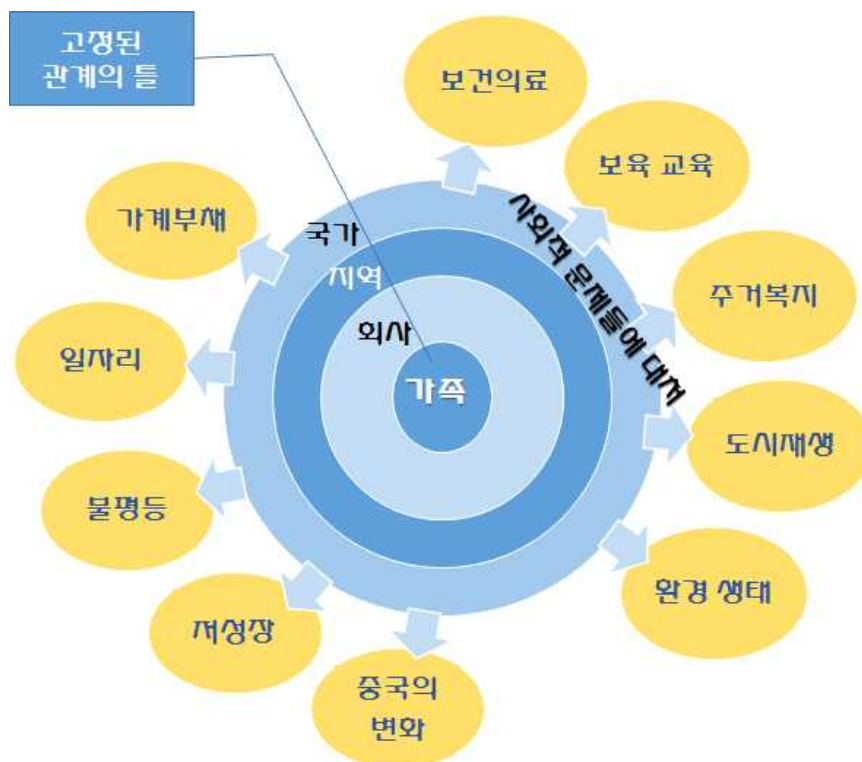


그림 4-4: 과거의 사회 집단 주체들과 그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들

- 더욱이, 기존에 전통적인 문제해결 집단으로 간주된 주체들(예를 들어 노동조합, 학생회, 농민회, 다양한 시민단체)과 같은 단선적인 계급 계층적 집단들의 단위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모아지지도 않고 문제해결이 쉽지도 않다는 것임.(전통적인 4인 혈연가족 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 집단은 누구인가?)
-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각 개인들은, 이전처럼 국가와 같은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또는 국민, 시민, 심지어 ‘우리’라는 주어진 공동체 속에 ‘파묻힌’ 개인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변화도 추구해 나가려 하고 있음.

변화와 혁신의 진원지는 개인 - 관계 - 공동체 - 시민의 맥락 속에 잠재해 있다.

-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사회는 개인 - 관계 - 공동체 - 시민 이니셔티브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 변화와 혁신의 잠재적 요소들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내제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과거의 해체’와 ‘재구성되는 미래’의 다이내믹이 작동하고 있음. 단, 이 과정이 많은 경우 ‘비자발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심각성이 있으며,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자발적’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길목에 사회혁신의 역할이 있다고 할 것임.
- 견고하기만 했던 오래된 기존 관계와 그 속에서 굳어진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한 복판에서 사회혁신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창조’,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긍정적 주체로 재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동력으로 거시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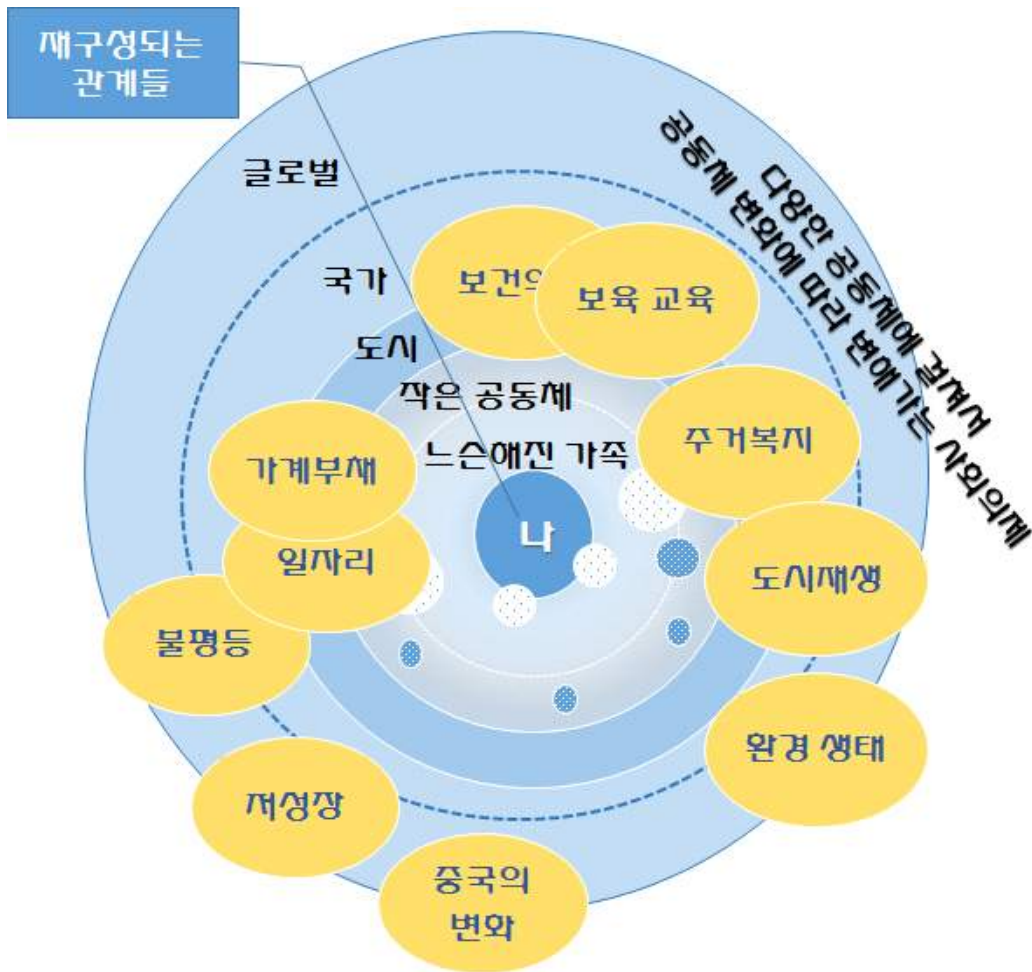


그림 4-5: 현재 시점에서 관계의 이동과 관계 속에 걸쳐있는 사회적 문제들

변화를 이해하고 ‘문법’이 달라졌다. 객관사회가 아니라 나와 주위를 먼저 보자.

- 따라서 사회혁신 전략은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과제를 분류하는 식의 도식과 문법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의제와 연결시키면서 변화의 전략을 짜는 식으로 이론적, 정책적 문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공백지대에서 관계의 변화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다양한 활동 방식과 해법을 창안해내면서 동시에, 시장 자체의 혁

신, 국가 자체의 혁신으로 변화의 반경을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 속의 나의 삶이 변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우선 오픈랩의 실행을 종합한 결과, 주체 자신과 주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9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4-6: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사회혁신 중심 키워드

-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사회문제들(가계부채, 일자리, 불평등, 건강과 교육문제 등)을 열거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대신, ‘나(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이 가운데 객관적 사회문제가 어떻게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는지, 개인과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문법을 사용할 것임.

0 솔루션이자 변화의 드라이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설적이지만 사회혁신 그 자체임.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의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대부분의 삶과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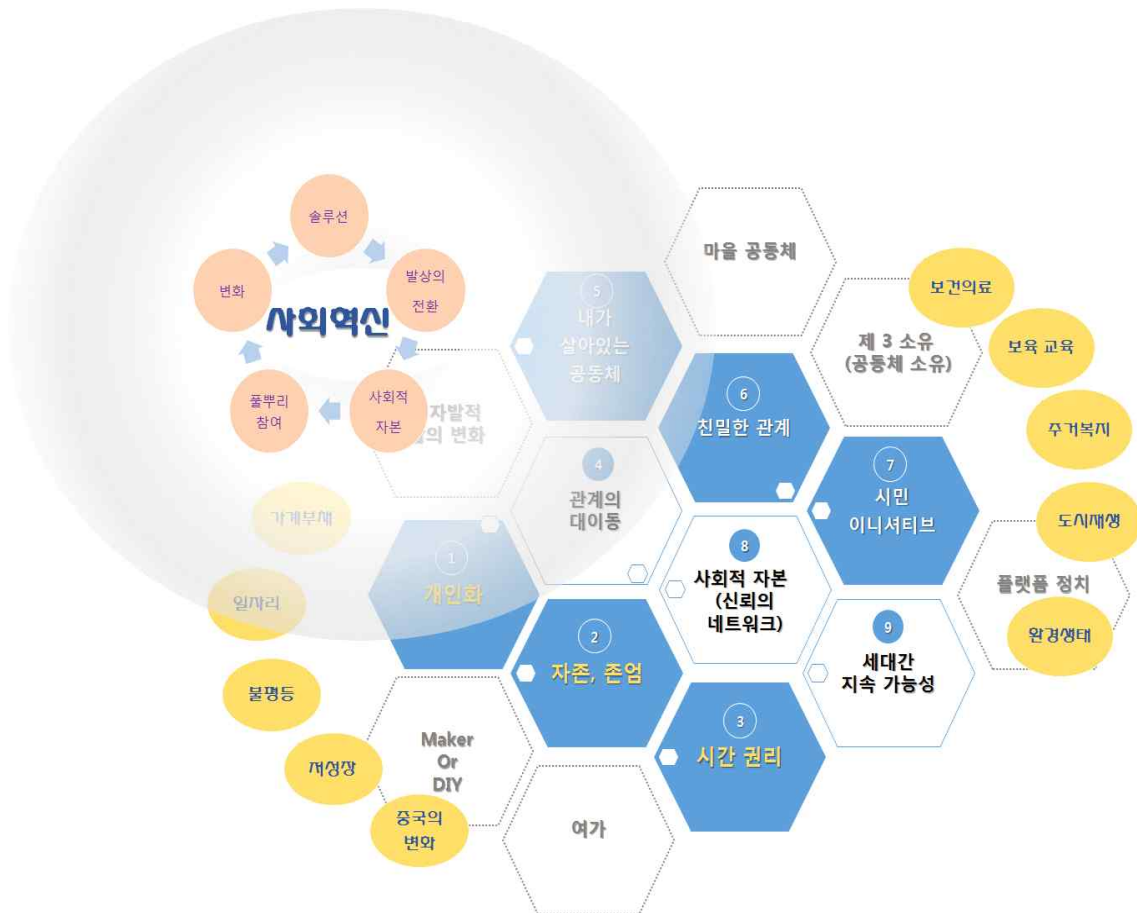


그림 4-7: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사회혁신과 연관개념들

- 그런데 기존 방식의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적 사회개혁으로는 지금 직면한 사회적 난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시장과 국가라는 전통적인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다수의 개인들, 주민들, 시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솔루션을 찾아 실험하지 않으면 과거의 마스터플랜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기 어려움.

- 변화가 절실한 여건에서 다수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인지하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미시적 생활현장에서부터), 기존의 마스터플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뛰어들어 ‘실행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어나감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임. 요약하면 사회혁신은 사회개혁의 뉴 버전이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 사회개혁이다.



그림 4-8 :사회혁신의 위치 (출처: BEPA 2010)

- 그러나 아직 사회혁신의 개념은 물론이고 실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유 정도는 매우 낮은 형편임. 참여 예산제나 혁신학교, 혁신파크, 사회적 경제

와 사회적 기업 등 사회혁신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지도는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사회혁신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협력에 여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임.

- 또한 사회혁신 정책은 전통적(traditional) 정책, 관례적(conventional) 정책과 비교되는 새로운 정책적 실험의 도입을 의미함. 즉 전통적 정책, 관례적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에 대한 뉴솔루션 모색**. 어디에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존재하는가? 사회적 난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사회혁신 정책이 필요함.
-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정책담당자는 사회혁신 정책을 보조적 정책이 아니라, 선도적, 주류적 정책으로 인식해야 함. 경제정체와 불평등, 가계부채와 주거불안,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인구변동, 기후변화 등이 전통적, 관례적 해법(시장과 국가에 의한 방식)으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러한 문제의식과 철학이 확고해야 사회혁신 정책이 힘을 갖게 될 것임.

공공정책은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 덧붙이면, 공공의 입장에서 사회혁신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 R&D투자가 미래를 위한 기술자본 준비이고, 교육투자가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 준비인 것처럼, 사회혁신 정책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본 투자임. 사회적 자본은 미래의 가장 결정적 자본이 될 것. 따라서 총 재정자원의 일정부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에 투자해나가고 그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며 앞으로는 R&D투자와 교육투자 이상으로 사회혁신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함.

1 **개인화(Individualization): 높아가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

- 21세기는 ‘개인’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힘을 얻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져가는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물론 개인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듯이 사회적 관계가 무시된 ‘완벽한 합리성’을 가진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협동하는 개인을 말함.)
-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이른바 강력한 개인화(individualization)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 여기서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가족, 학교와 직장, 지역, 국가와 같은 공동체들이 개인들에게 규정하는 일방적 특징을 지적한 것임.



그림 4-9: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개인화’와 연관개념들



- 사회의 변화는 더 많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수동적으로 안주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임. 이 과정엔 기존 공동체와 관계가 재설정 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임. 개인주의가 추세적으로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통신혁명 등에 힘입어 온라인 등에서 공동체에 접속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현상에 대해 클레이 셔키 등이 네트워크화 된 개인화 (networked individualizat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 물론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두어야 할 것은, 개인의 자율과 독립에 대한 추구는 분명히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회생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떠밀려 비자발적으로 개인화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이 경우는 자율로 독립이 아니라 격리와 고립으로 인식되게 됨. 최근 <무연사회>에 대한 우려는 이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현재 개인화 현상은 다수가 비자발적 강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다양성의 원천이 늘어나게 되며 개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재생산 단위가 될 수도 있게 됨. 공공의 정책은 개인화의 긍정성을 살려주고 비자발적 성격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복지 정책 등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임.

개인화의 자발적 측면과 비자발적 측면

- 개인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혁신과 발전에 의해 뒷받침 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임. 개인 단위로 생활이 가능한 물질적 수준이 지원 되어야 개인화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를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하게 해줌. 실제 현재 수준의 개인화 역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임.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개인화 추세와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상호 영

향을 받으면서 상호 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는 ‘Maker’, ‘DIY’, ‘누구나 코딩’ 등의 기술적 트렌드는 개인화와 연동하여 변해가고 있음.

- 개인화 추세가 삶의 방식에 던진 가장 파급력 있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할 것임. 1인 가구현상을 자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희구라고 판단할 수 있음.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1인 가구 현상을 주로 ‘자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자연스런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네 가지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했다.”)
- 또한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이 결코 같지 않다”면서,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사회활동을 더 활발히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다는,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대중문화가 발달한다는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주장함.<sup>61)</sup> 요점은 개인들이 외롭지 않게 참여할 공동체들이 지역이나 도시, 직장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가의 여부일 수 있음.

‘1인 가구 생활’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

- 하지만 ‘1인 가구’, ‘1인 생활’, ‘싱글턴(singleton)’ 등은 인류가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 방식임. “인류가 집단생활을 해온 지는 20만 년에 달하는데 반해 수많은 사람이 혼자 살기에 도전한 기간은 아직 50년에서 60년밖에 되지 않는다.”<sup>62)</sup> 우리나라는 길어야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보면 20년도 채 되지 않음.

61)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 퀘스트

62)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가 압도적 대세가 되어버린 북유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경향이 아무리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우리역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이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도록(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사교활동도 활발하게 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는 혁신을 구상해야 할 것임.
- 시장은 이미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공공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시장의 맞춤은 기본적으로 편향과 왜곡을 낳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공정함에 의해 수정되어야 함. **시장은 자금 여유가 있는 1인가구 계층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계층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생활환경이 극단을 오고가는 노인 요양원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혼자 사는 생활은 혼자 사는 공간(주거)의 변화, 혼자 사는 식생활의 변화와 문화생활의 변화, 사회 안전망에 연결되는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특히 필요로 하는 공동체 욕구의 변화(즉 대인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됨.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사회가 가능하게 해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만 온라인 관계만으로 부족함. 이 대목에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면서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방식이 추구되어야 하고 크게 보면 최근의 마을 공동체도 이런 경향을 수렴하려 하고 있음.

2

**자존감(self-respect)과 존엄(dignity); 차세대 사회정책의 목표**

자존과 존엄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과정이며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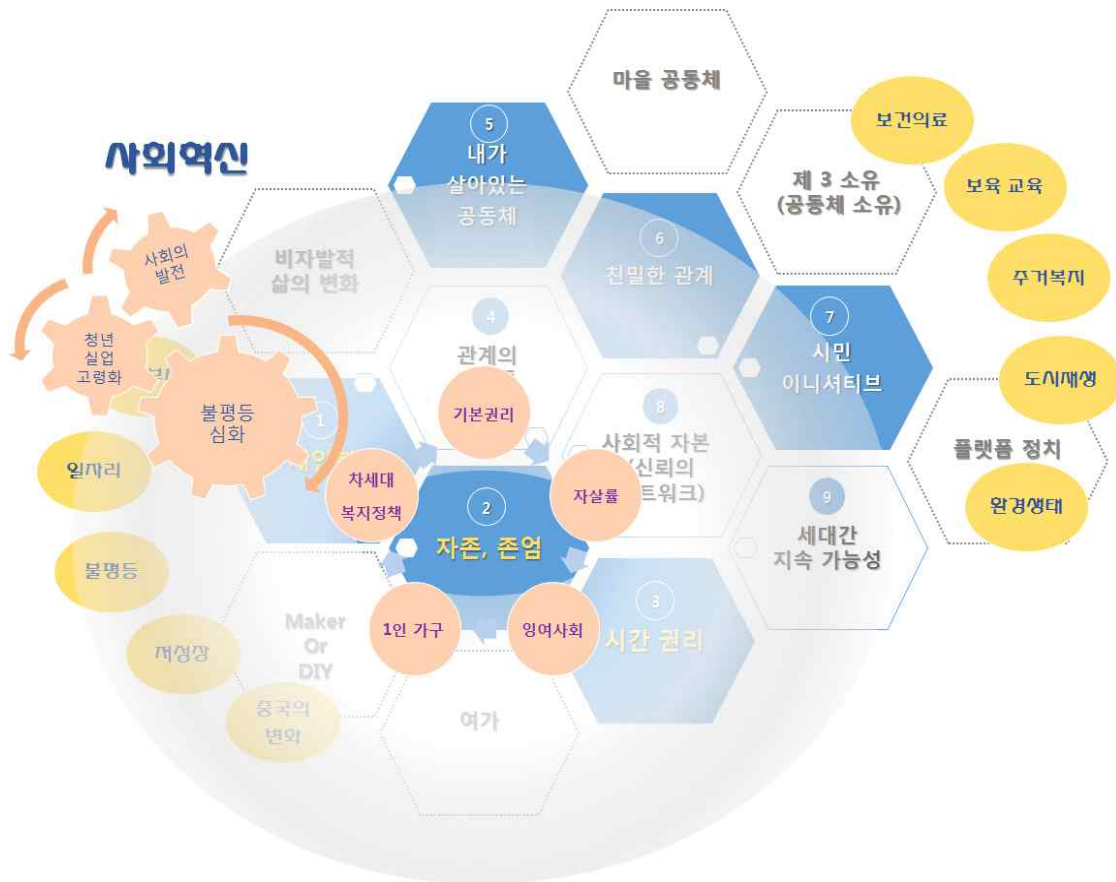


그림 4-10: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자존과 존엄’과 연관개념들

-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개발연대에 몰두했던 기초적인 생존권이나 인권만을 두고 정책적 씨름을 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없음. 시민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권은 물론이고 시민을 존중하고 존재와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품격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임. (이런 취지에서 과거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사람 중심경제’나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차기 비전으로 제안될 수 있음.)

### 자존(self-respect, self-esteem)과 존엄(dignity)이란?

“우리는 자존감(self-respect or self-esteem)을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인간이 갖는 자기 자신의 가치감, 자신의 선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자신의 인생 계획이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둘째로 자존감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힘에 달하는 것인 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포한다.**”

\* 롤스는 수치심(shame)이나 모멸감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자존감에 타격을 받을 경우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568~575)

\*출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99 revised edition

\* 특히 롤스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기본재(Primary goods)로서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기본재로서 자존감을 강조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본재를 다섯 가지 예시했는데, 1)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들, 2) 다양한 기회들의 배경 아래에서 이전의 자유와 자유로운 직업 선택, 3) 기본구조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 안에서 책임이 있는 정책과 직위의 권한과 특권, 4) 소득과 부, 5)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들

\*출처: 존 롤스(1993),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인간성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자유’와 ‘정의’와 ‘연대’와 같은 수많은 인간적 가치들을 위협하는 사회를, 모든 사회 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을 올리자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무시는 사람을, 그 표현과 감정과 기분의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또는 세심하게 보지 않거나 마치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출처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현재 사회활동의 도처에서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음. 입시지옥에서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자존감’이며, 스펙경쟁과 취업경쟁에 몰입한 청년들은 끊임없이 ‘존재감’에 대한 질문을 강요받음. 이른바 ‘잉여사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들이 사회적 잉여로서 취급받는 현실이 이를 입증함. “자신은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존재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은 타인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이 동등한 가치

를 가진 것으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슬픔보다도 더욱 통절한 것”<sup>63)</sup>

사회적 잉여 취급을 받는 청년들의 존재현실은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말해준다.

- 30, 40대 우리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들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각종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은퇴 후의 노년은 불안정한 노후 여건 속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임. 한마디로 전 세대에 걸쳐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심 척도인 존재감, 자존감, 존엄은 일상의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존과 존엄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님. 그것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 과정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이것은 **자존과 존엄이 우리사회의 노동과 복지, 교육 등 주요 경제 사회정책을 펼 때 매우 강력한 준거 틀이 될 것임을 말해줌.**
-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단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아님.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은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멸시와 모멸감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진정한 좋은 일자리란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과 인격, 사람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게 하는 것임.

### 대학생과 대학 청소 노동자, 서로 다른 장면에서 마주하다.

해마다 5월은 대학가에서 축제의 열기가 뜨거운 달이다. 2015년도 그랬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다.

63)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40쪽

하나는 K대학교 학생회가 축제가 끝난 뒤, 학교 안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50여명을 초대해 따뜻한 감사의 잔치를 연 것이다. “축제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학내 노동자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학생회장은 감사 편지에서, “그동안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두면 축제 다음날 그 자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늦게까지 전기를 봐주시는 선생님과 새벽에 나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한겨레 신문 2015년 5월 29일자)

다른 하나는 S대학교에서 축제를 하기 전에 학생회가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예쁘게 치르고 싶어”서 교정에 걸려 있던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며 노동자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태다. 특히 졸업생들은 비판 성명을 통해서 “청소노동자들의 피 토하는 심정을 단순히 천 조각으로 여긴 총학생회의 무심하고 안일한 태도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되는 교육을 중시하며 지향한다는 학교가 구조적인 문제 책임을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안타깝고, 졸업생으로 가졌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개탄했다. 이후 학생회는 자신들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한겨레 신문 2015년 5월 21일자)

대학 축제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를 전통적인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문제로 사안을 접근할 수도 있다.

- 또한 최근 경제적으로 장기침체, 실업과 고용불안, 불평등이 단지 물질적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삶에서도 박탈과 모멸, 존재감 등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살률도 그 하나의 사례. ‘투명인간’에 대한 논란이나 ‘삼식이’ 얘기 역시 마찬가지임.
- 이는 역으로 복지정책 등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단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과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함. “우리는 복지를 단순히 물질적 재화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 문제는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존중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문제다.” “물질적 재화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구체적인 방식일 것이다.”<sup>64)</sup>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세워주는 복지’가 될 것이다.

- 즉,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복지가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음. “복지제도가 복지 대상자들을 어떤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부끄럽고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그것은 모욕적이다.”
- “내 집 앞의 이방인들은 확실히 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관할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그들이 과연 상응한 존경과 배려를 받고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sup>65)</sup> “품위 있는 사회는 또한 복지사회이어야만 하겠지만, 모든 복지제도들이 그 자체로 한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품위 있는 사회에서 복지는 인간성에 대한 모욕의 회피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 이는 마을 단위의 풀뿌리 복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마을 지향 복지란 주민이 복지 자원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서 마을 속에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 이웃들과 일상적으로 맺는 관계에서 형성된다.”<sup>66)</sup>

**#1\_왜 스페인의 시위는 존엄의 행진(Marches for Dignity)이 되었을까?**

-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시위현장에서 ‘존엄’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에서 2014년 3월 '존엄을 위한 행진', 2015년 '빵, 일자리, 주

64)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65)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82쪽  
66)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6쪽



거, 존엄을 위한 행진'이 대규모 군중의 참여아래 있었다. 경제 불황과 긴축, 복지국가 후퇴에 대한 저항을 '존엄을 위한 행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Published on Saturday, March 22, 2014 by Common Dreams

## Spain 'Marches for Dignity': Massive March Against Austerity

"No More Cuts!"

by Common Dreams staff



Massive crowds gather during a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in Madrid, Spain, Saturday, March 22, 2014. Hundreds of thousands from different parts of Spain marched towards the Capital to join a large anti-austerity demonstration,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the Government and to express their anger at government financial cuts, its housing rights policies, and the high unemployment rates. (AP Photo/Andres Kudacki)

- 긴축으로 인해 교육, 보건, 사회적 수당 지급 등이 대거 축소되면서 기대했던 인간다운 삶이 크게 위협받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존과 존엄은 경제위기 속에서 유럽 시민들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 #2\_최근 존엄이 언급된 추가 사례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교수가 칼폴라니 연구소 창립즈음에 한 대담에서도 이런 구절이 발견된다. “살아가면서 많이 듣고 많이 느끼게 되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그렇죠.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감도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도 필요하고 독립적 생활을 통한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무엇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전자책 출판협동조합 롤링다이스의 대표 제현주씨는 서울혁신파크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중요한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혁신파크의 문화로 ‘탈권위’와 ‘개인의 자존’이라는 말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2015년 5월, 서울혁신파크 인터뷰 중) [http://s\\_innopark.blog.me/220370251798](http://s_innopark.blog.me/220370251798)

3 시간권리: 시민들에게 '시간에 대한 자유' 를 되돌려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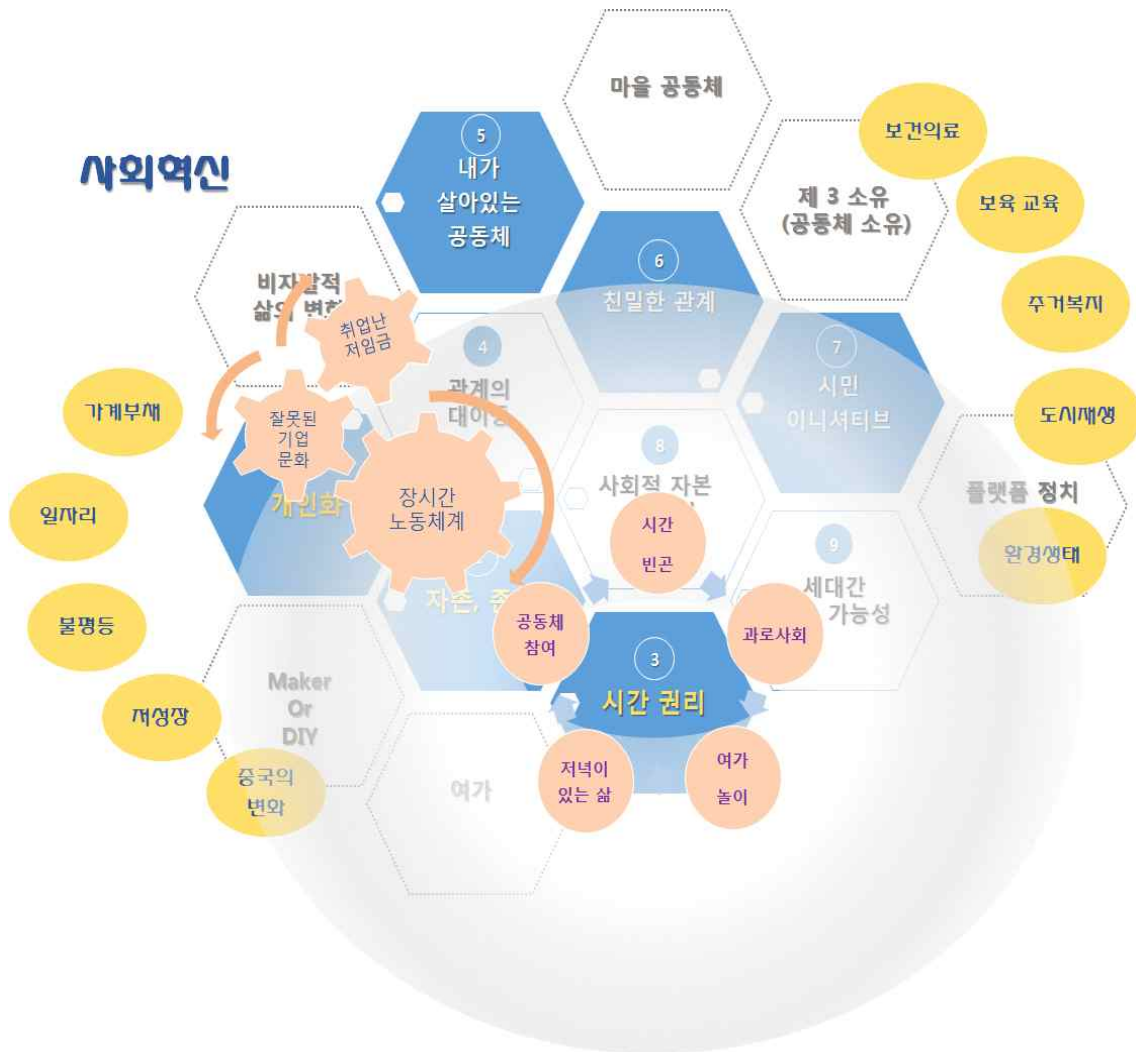


그림 4-11: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시간권리'와 연관개념들

-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시간의 통제와 배치가 됨으로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자유롭게 쓸 권리를 회복할 때 개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임. “모든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자아의 향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sup>67)</sup>

67) 김영선(2013), <과로사회>, 이매진

### 시간 빈곤(time poverty)사회 대한민국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이었던 사회, 이제는 개인에게 시간을 돌려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SBS에서 취재했던 '시간빈곤 대한민국'의 일부 내용이다. 대략 줄거리는 이렇다.

"먹고 자고 씻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약 90시간. 그러면 78시간이 남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통근, 통학 시간은 가장 길다. 가사일, 육아에 하루 1시간만 써도 이미 시간은 마이너스 상태.

결국, 먹고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아침은 거르기 일쑤고 수면시간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너무 바빠서 생존에 필수적인 시간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시간빈곤'에 빠진 사람이 노동 인구의 42%나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제를 더 나은 인간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더 생각해볼만하다.

- 요즘에는 '주거권'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음.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쉬고 누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 취지로 '시간권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을까? 시민들이 자신의 휴식과 자신만의 생활과 자신만의 계획을 위해서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은 없어도 어찌면 시간이 더 절실 할 수 있음. 수년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바로 시간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된 얼마나 큰 열망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장시간 노동은 질병, 시간빈곤, Time Poor에서 벗어나는 혁신 필요.

-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sup>68)</sup> 특히 우리에게서 '장

68) 김영선(2013), <파로사회>, 이매진

시간 노동'이라는 결정적인 벽 때문에 더 절실할지 모름. 2014년 기준 2160시간이라는 OECD 부동의 2위(멕시코 1위). 산업화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지배했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 여기에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회사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우리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시간권리'를 희생한 대가로만 경제적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아닐 것.

- 시간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 문제'나 '노동 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적 의제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 이제는 우리도 '과로사회를 넘어서 여가사회로' 혁신해야 할 시점임. 시간은 유한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임. "시간빈곤, time poor"를 벗어나려는 큰 발걸음을 떼어야 함.

###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신화

우리 국민이 오랜 동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시간권리를 박탈당하는데 기여(?)한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첫째는 '개미와 베짚이의 신화'다. 오직 노동시간을 늘려 빈곤을 벗어나려 했던 개발연대의 가치였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휴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그것은 철저한 생산성 압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휴가도 경쟁력이다." "꼭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식의 논리였음.)

\* 출처: 김영선(2013), <과로사회>, 이매진

또 하나의 신화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에서 시간을 돈과 연결한 것이다. 즉, 시간이 돈과 연관되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걱정하고 저축하거나 보다 수익성 있게 시간을 사용하려 했다. 시간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일은 시간을 더욱 수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

\* 출처: The Economist, "Why is everyone so busy?", 2014년 12월 20일자.

\* 이제는 개미와 베짚이의 신화, 시간이 돈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 시간에 대한 자유권을 얻지 못하고 일상에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관

계가 대 이동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는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위험을 증폭시키게 되고 자존과 존엄한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시간권리에 관한 화두가 너무 성급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회혁신에 대한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자기 비전을 계속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 노동, 복지, 청년 등의 정책과제를 풀어낼 때 고려해야 할 가치로서 ‘자존과 존엄’과 함께 ‘시간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하늘아래 누워있을 최소한의 공간과 함께 24시간 중에 숨을 쉴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주거권과 시간권, 여가권을 돌려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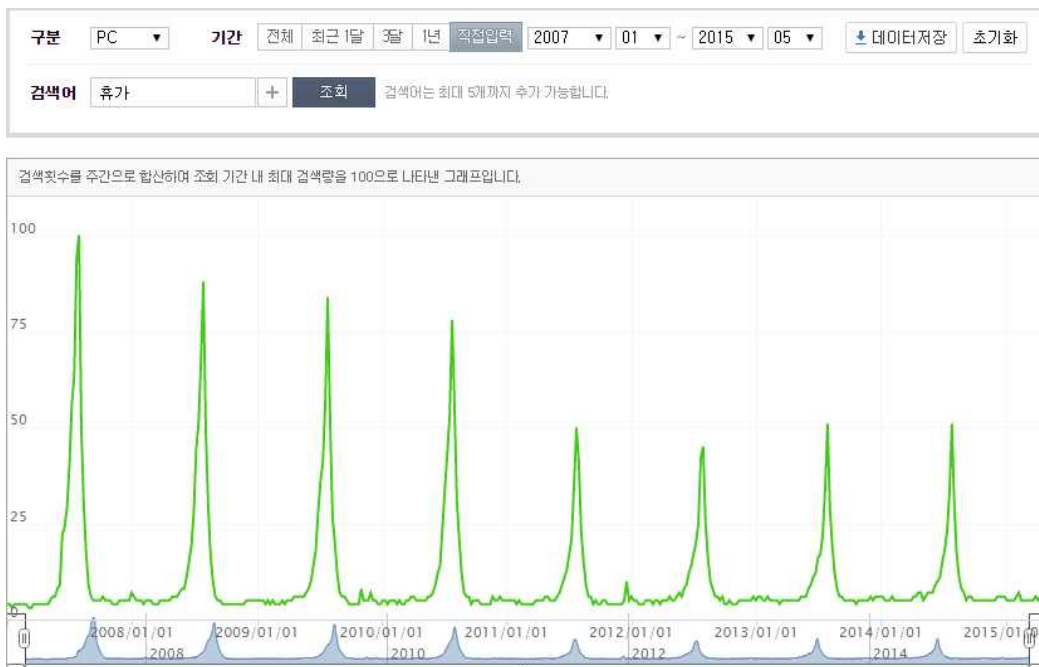


그림 4-12:휴가의 네이버 검색어 빈도 추이(여름 휴가에만 잠시 피크에 이름)

- 앞서 인용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케인스가 희망한 100년 후의 사회에서 모두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회를 말하고 있음. 시간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높은 차원의 가장 중심적인 욕구임을 증명해준



다고 할 것임. 또한 오랜 역사기간 장시간 노동에 찌든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오랜 숙원을 푸는 비전과 혁신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임.

4 **관계의 이동: 개인은 지금 기존 관계에서 빠져 나와 새 관계 모색중**



그림 4-13: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관계의 대이동’과 연관개념들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 전까지 비교적 고정적이고 탄탄하고 단순한 몇 개의 관계에 속했음. 예를 들어 혈연중심의 가족, 지역적 고향, 학교 동문 - 학생회, 평생직장 -노동조합/농민회, 단일 민족과 같은 관계가 있었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점 빠르게 약화되거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친척의 끈이 희미해진 것은 오래되었고 가족의 끈조차 느슨해지고 있음. 더욱이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를 강하게 규정짓던 지

역과 고향도 세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묻어지고 있음. 학생회나 노동조합은 과거의 규정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임. 이미 200만에 육박하는 이주민은 단일민족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균열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사회의 기본단위였던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눈에 띈다. 과거에 전형으로 불리던 '4인 혈연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1인 가구시대, 솔로 소사어티 시대를 이미 맞고 있음. 그러나 복지와 경제, 공동체와 경제를 위해서 솔로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나 사회혁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형편임. '외롭지 않은, 서로 연결된 솔로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혁신이 더욱 풍부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대유행과 정규직의 장기근속 불안은 매우 탄탄했던 직장의 인간관계를 매우 임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변질시켰음. 노동시장의 이중화 등의 달라진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정된 협력 틀이었던 노동조합의 약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서구에 비해 확실히 오랜 중앙 집권적 국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국가 귀속감과 국민으로서의 연결감, 여기에 오랜 단일 민족 전통이 겹쳐지면서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국가 공동체에 대한 연결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빠른 속도의 세계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 정치 사회의 분권화와 시장화 등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국가와 자신의 관계 규정력을 약하게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물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정주성의 불안으로 인해 도시 소속감 역시 큰 것은 아님)
- 이처럼 기존 공동체와 관계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해체되거나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중. 어떤 측면에서는 '자

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실 더 강력하게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동 중임.

전통적 관계의 비자발적 해체가 초래한 무연사회의 공포

- 이처럼, 기존 공동체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함. 바로 이 같은 '이동의 중간 과정'에서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삶의 불안정성,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관계의 단절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겪고 있음. 즉, 시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특히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무연사회'의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음, 인간관계의 커다란 해체와 전환, 이동 경험하고 있는 중.
- 앞으로 해체되고 있는 관계를 대신해서 개인들이 원하는 인간관계는, 기존의 관계보다는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면서 좀 느슨한, 동시에 몇 가지 확실적인 관계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관계, 대규모적인 수직계통구조를 갖기 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의 연결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누군가가 위로부터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기 조직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
- 현재는 이들 새로운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세력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음.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조합/학생회 등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이에 기반한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공동체나 관계의 형성이 지체되면서 새로운 세력 형성의 기반 역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지대'에 다양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실험이 다채롭게 시도되어야 할 듯 하고 거기에서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할 것. 서양 사람들이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그 지대의 21세기 한국버전의 형태로.

5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 다양하고 중층적인 열린 공동체가 전망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람관계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 없음.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주목할 만한 것이기도 함.
- 얼마 전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나 시민,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파묻힌' 개인**으로 존재했음.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율,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보호되었음. 이는 가족, 지역, 직장, 국가 등 거의 모든 공동체 걸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임.
- 그러나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물론 그것이 공동체나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완전한 개인주의 추구는 아님.
-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율과 독립을 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존"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의 복지 안전망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남. 현실에서 육아나 돌봄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존재해야 개인의 독립과 자율도 보증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좀 더 느슨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즉, 대규모의 일

차원적 획일적 공동체들이 아니라, 분권화 된 다면적/다층적인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길 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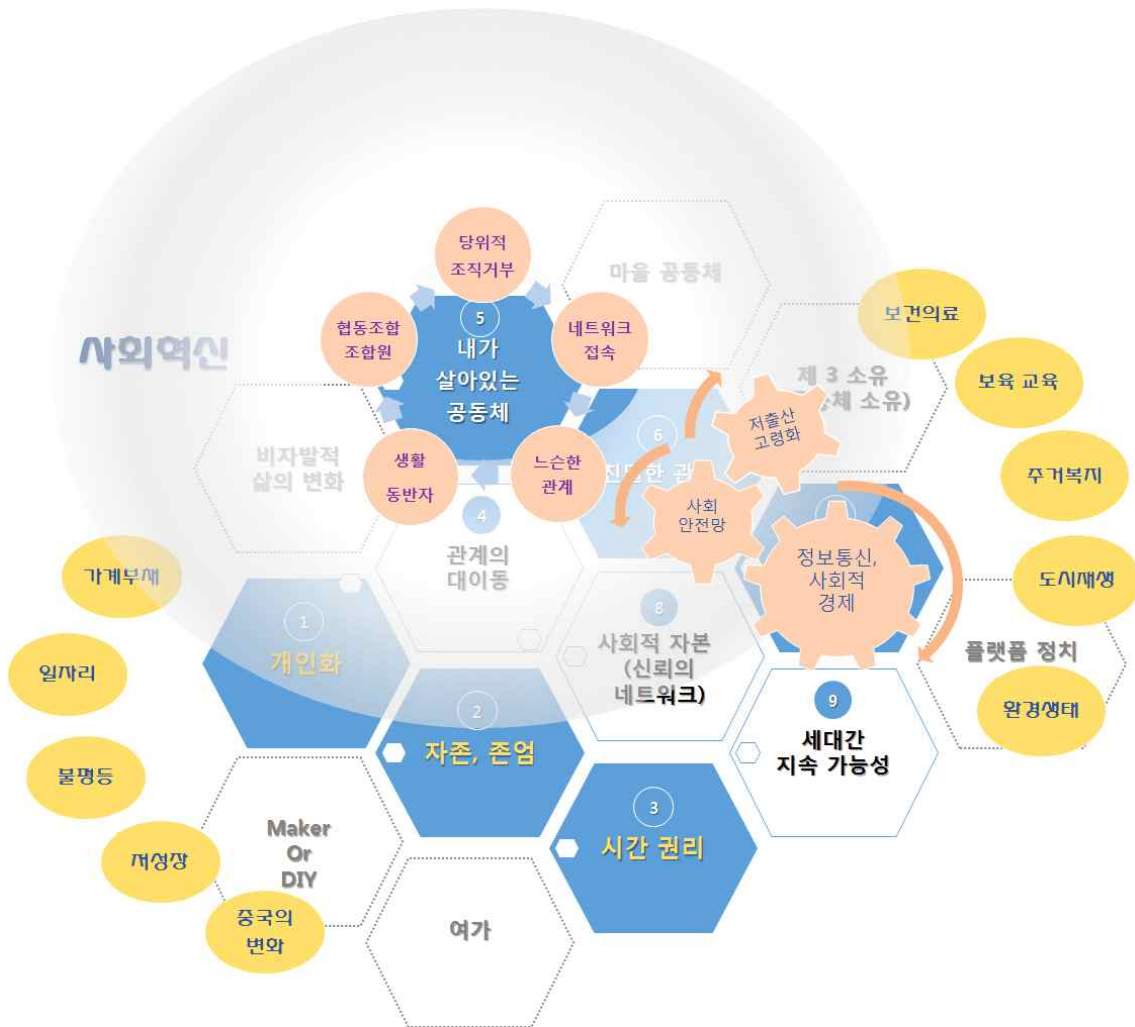


그림 4-14: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와 연관개념들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디며 키워가는 열린 공동체를 원한다.

###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든다?

혼자되고 있는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새로운 공동체를 스스로 조직하면서 관계 맺기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카오스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에 자기 조직화란 개념이 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에너지 유입 등 시스템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조직화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대략 정의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21세기의 시민사회운동 조직화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시민 사회운동의 조직화는 과거처럼 일부 엘리트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단순히 계급 계층별 조직으로 규합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전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조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요점은 "열려진 계에서 일정한 에너지가 투입되면" 사물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여 질서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갖는 힘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점으므로, 어떻게 스스로 자기조직화 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반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자율과 독립을 원하는 더 많은 개인들이 느슨하게 열린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의 다양한 양상들이 발견될 것은 명확함. 예를 들어 최근 커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역시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디며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도시 속 마을이다.”<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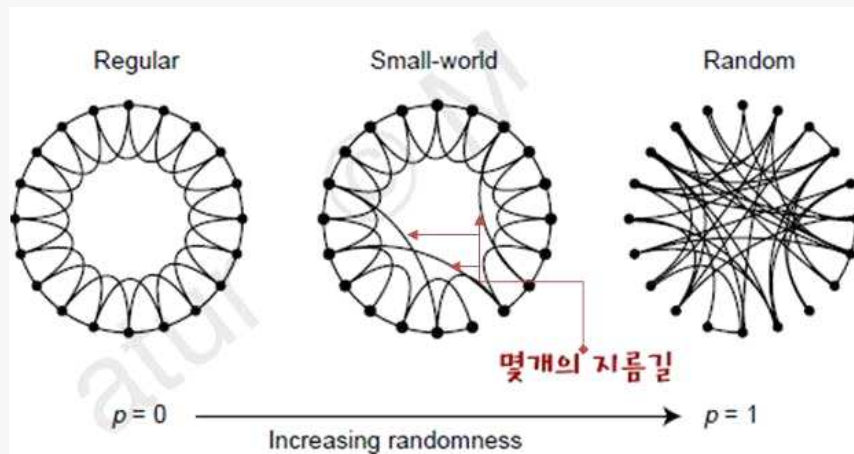
### 공통 관심 -연결의 확장 - 약간의 연결로도 작아지는 세계

-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보통 현실세계의 사회나 인간관계는 완전히 정형화된 규칙성을 갖는 것도(그림의 왼쪽 regular), 그렇다고 완전히 무작위적인 무질서를 보이는 것도(그림 오른쪽의 random) 아니란다. 그 중간 어디쯤이 현실일 것이란다. (Duncan J. Watts, Steven H. Strogatz(1998), "Collective dynamics of

69)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small-world' networks")

-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발견한 중요한 점은, 왼쪽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 단지 약간의 임의적인 지름길(무작위로?)을 몇 개 엮었을 때에도, 각 점 사이의 접근 거리가 획기적으로 짧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6단계만 거치면 인류는 모두 연결될 수 있다'는 식의 이미 1960년대 나온 '6단계 분리이론'을 연상하게도 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는 암시들이 있다.



- 이를 요약하면,

- 1) 의외로 사회는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단절된 그룹들로 흩어져 있고, 좀처럼 협력이나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
- 2) 그런데 만약 이들 단절된 그룹들 사이에 '약간의' 연결을 맺어준다면(마구잡이식의 해쳐모여나, 조직 기피적인 개인주의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 3) 각 그룹들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유용한 상호 연결, 상호 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저자들이 표현한대로, clustering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계의 거리 path length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결국 연결/조직화/허브 역할이란 과거의 획일적인 조직이나 시장의 무질서와 달리, 다양성을 인정할 수많은 작은 모임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그들 사이를 넘나드는 수평적 끈을 살짝 엮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물리적 공간이든, 조직적 관계이든, 정기적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 특히 공간개념이 아니라 영향권이라는 의미의 장(場, field)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 특히 물리적 공간뿐 아니다. 의식의 공간, 사람들의 생각의 공간도 너무 단절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의 성과를 참조해야만 우리 앞의 난제들을 조금씩 풀 수 있을까 말까한 시기인 듯하다. 생각의 혁신을 위해서도 '약간의 가교'가 필요할 것이다.

6

친밀한 관계: 사적, 공적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요구

- 사회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관계의 변화가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음. 첫째는 기존 혈연가족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적 관계. 개인의 생활과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할 최후의 의지처 같은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음. 반대로 공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공개화 되고 공통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고 맺어지는 관계는 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시민으로써, 국민으로써 도 시나 국가와의 관계가 대개 그러함.
- 반면 시장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정의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이고 공적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만 사적인 관계. (물론 현실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고,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가 허다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계약이 그러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이 그러함.)
- 그런데 전형적 사적 관계였던 기존의 혈연가족 관계가 최근 변화되면서 다양하고 느슨한 방식으로 폭넓은 분화과정을 겪고 있음. 그 대표적인 결과의 하나가 현재 1/4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비중임. 동시에 기존의 공적 관계는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약화되기도 했고, 일방적인 귀속감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감으로 관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물론 최근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다시 공공과 개인의 공적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자각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은 최근까지 관계에 의해 얻어야 할 필요를 시장에서 계약을 통한 거래관계로 해결(구매)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면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냉정한 시장의 관계는 명백히 전체 인간관계를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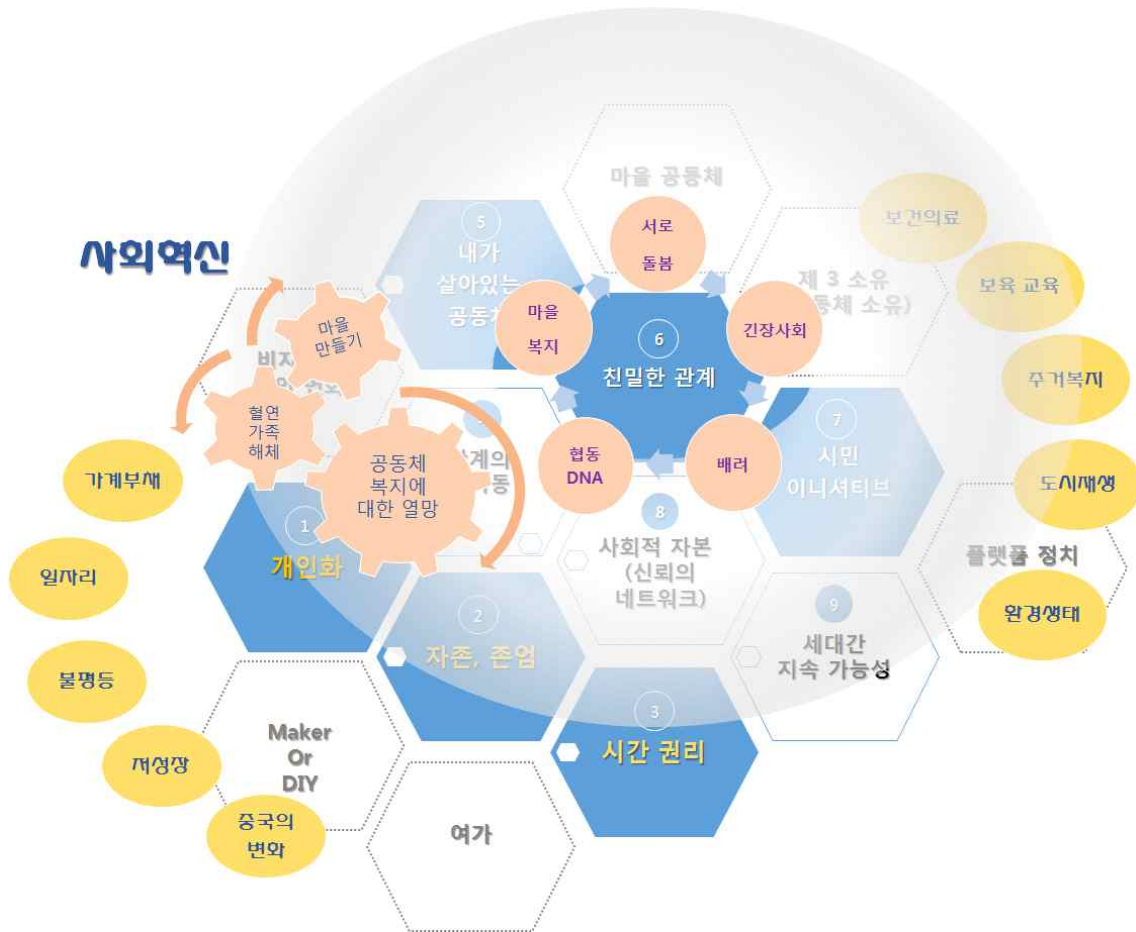


그림 4-15: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친밀한 관계’와 연관개념들

도시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가 대안일 수 있다.

- 이런 조건에서 사적인 관계처럼 배려와 이해의 관계가 작동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친밀권이라고 할 수 있음.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방문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나 의논, 잡담을 즐기기 위한 살롱적 관계도 친밀권에 포함된다. 타자의 구체적인 삶, 생명에 일정한 배려나 관심을 갖는 것이 친밀권의 최소조건이다.”<sup>70)</sup>

70) 사이트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108쪽

- 이는 대표적으로 이웃 사이의 따뜻한 배려관계, 또는 ‘호혜적 생활’ 관계망 등에서 구현될 수 있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도시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때,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상의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망(친밀권, intimate sphere)이 생기면 가정 폭력 문제를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공의 공간’으로 드러내기 쉽다. 또 지역 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개입하기도 훨씬 용이해진다.”<sup>71)</sup>
- 친밀권은 무너지가는 기존 관계를 대신하는 대안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돌봄이나 안전 등 복지정책에서 특히 이 관계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높음. 돌봄이나 안전은 공적 관계에 의해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공공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반해서,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 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에 의해 형성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밀권이 돌봄과 안전에 더욱 적절함.
- 친밀 관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친밀권은 자존과 존엄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됨. “친밀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외부에서 부인 혹은 멸시의 시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자존 혹은 명예의 감정을 회복하고, 저항의 힘을 획득하기 이한 의지처일 수 있다.”<sup>72)</sup>
- 앞으로 우리사회는 경제영역은 물론 지역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살아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수많은 사회혁신 활동이 예상됨. 다수의 사회혁신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처럼, 새로운 열린 공동체 역시 ‘거래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계약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의무와 권리로 고정된 공적 관계도 아닐 것임.
-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 공동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진 개방적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것은 보다 관계 지향적일 것이고, 보다 수평적일 것이며, 호혜적 협력에

71)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1쪽

72)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근거한 상호 연결을 추구할 것임. 친밀한 관계는 다수의 이와 같은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특징이 될 것임.

친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형성의 매개자’가 돋보일 것

-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연결자’, ‘관계 형성의 매개자’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됨.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각 영역의 연결을 도와주는 ‘브릿지 전문가’가 부각될 것임. 사실 최근의 사회운동과 정치, 행정에서 플랫폼(platform)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도 유사한 맥락일 수 있음.

7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공공영역을 넓힌다.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임. 예를 들면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지역에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소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안성의료생협과 같



은 시민에 기반한 의료조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음.

### 관계 국가(Relational State)의 비전?

관계국가 비전은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유럽 중도 좌파의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시장 실패를 대신하여 다시 국가가 거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건, 교육, 환경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 시스템을 말하는데 참조해볼 수 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며 국가는 정부와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적 공간을 형성해주고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분산 시키고 지자체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공공서비스를 운용한다.

또한 공공적 의제에 대해 공공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다. 이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4-15: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시민 이니셔티브’와 연관개념들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임<sup>73)</sup>.
- 사실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협력하여 해결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혁신 자체가 주민 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이니셔티브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과 주민, 시민들의 관계가 여전히 제공자 - 수혜자 관계라는 과거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됨.

### 석관동 두산 아파트의 진정한 혁신- 고용과 에너지를 연결하다.

2013년 초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한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2년간 절감한 전기료 1억8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해 올초부터 경비원 월급을 평균 20만원 인상하기로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제주 씨(69·사진 왼쪽)는 “주차장 전등을 바꿨을 뿐인데 월급이 오르고 고용이 보장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심재철 입주자대표회장(오른쪽)은 “LED 교체 주기가 5년으로 기존 형광등보다 길어 교체비용도 아낄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참고하여 서울 성북구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에 나선다. 전등을 전력 소모가 적은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해 절감하는 공동전기료를 경비원 급여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3)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유경제

사회혁신의 대명사로 공유경제와 공유도시가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홍보하는 활동도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우버택시 사업모델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처럼, 공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얼핏 시민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자는 소박한 뜻으로 공유경제를 얘기하면 착하고 선의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무수히 다른 의미를 내포한 '공유'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말 많은 공유경제를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공유할지를 가지고 따지면 약 다섯 가지 범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1. 생산수단의 공유 → 전통적인 사회주의 해법이다.

2.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의 '잉여 공유' → 여유가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핵심 의제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다.

3. 지적자산에 대한 공유 → 대표적인 현대의 공유자산이라고 할 지적자산에 대해 특허 등의 방식으로 배타적 울타리를 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운동'이 그것이며, 웹 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원리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닿아있다.

4. 공공자원에 대한 공유 →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자원을 공동체가 공유하거나, 아예 지역공동체등이 공유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최근 쟁트리피케이션 등이 이슈가 되면서 지역 공동체나 협동조합에 의한 '공동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버식 공유모델 → 대체로 중산층이 가진 작은 유희(?)자산(빈방, 쉬는 자가용)을 온라인을 통해 임대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자산을 인터넷이라는 관계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여 '(빈방이나 자동차)임대중개'를 해서 엄청난 주가를 자랑하고 있는 우버 택시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미있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서울시나 공공조직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대상은 아니다.

앞으로 공공 쪽에서 공유경제를 말하려면, 공동체에게 공유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방안을 제공하고, 쟁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힌다.

-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물적 자본의 부족의 고려되던 시대였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적자본 투자가 부쩍 강조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그러나 실제로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있었는지는 회의적임.)



그림 4-16: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사회적 자본'과 연관개념들

-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인적자본투자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투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앞서 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자

본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 활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함.

- 신뢰가 낮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근본인데,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결과 경제적 거래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실제로 줄어들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뢰자본은 21세기 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신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그 경향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세월호 참사는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차원에서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에 대한 시민의 신뢰’ 차원에서 더 심각하게 숙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실제로 세월호 사건 직후, 청소년들에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신속하게 정부가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48%), ‘전혀 그렇지 않다’(21%)고 응답, 전체의 6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매우 그렇다’는 답은 3%로, 극소수. (헤럴드 경제 2014년 5월 7일자) 청소년의 신뢰자본이 낮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면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쌓여 가는가? 대표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소득이다. 수입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남을 믿을 여유도 생긴다. 둘째는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수준이다. 단결이 잘된 사회일수록, 단일 민족에 가깝고 언어도 통일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신뢰구축이 용이하다. 셋째, 소득의 고른 분배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사람이 많을수록, 친밀함이 유지된다. 소득수준의격차가 극심하면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요인은 제도적 구조다.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국가이고 국민

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편이고,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번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면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sup>74)</sup>

- 위의 주장에 기반할 때,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의 신뢰자본을 약화시키고 있고, 또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약위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이 공공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사회혁신활동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신뢰의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신뢰 관계를 넓히는 방식의 문제해결 접근법은 경제적으로도 ‘거래 비용’을 줄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음.

감시를 강화하는 대신에 신뢰를 넓혀 문제를 해결한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 설치’와 같은 재래식 솔루션 대신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 지역 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동네 안전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 감시체계 보다는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확대하여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임.

9

세대간 지속가능성: 앞 세대에게 원하는 바램 그대로 뒤 세대에게

- 우리사회는 현재 세대에 걸쳐서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직면한 다수의 과제들을 안고 있음. 우선 심각한 불평등과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음. 예를 들면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현재의 불평등과 인구성장속도가 계속된다면,

74) KBS 사회적자본 제작팀(2013),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50쪽





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회의하게 함.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생태의 유지와 보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긴급한 현안으로 우리 앞에 당면해 있음.

### 세대 간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최근에 갈수록 세대 사이의 갈등이 커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대 사이의 자원 분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세대 사이의 자원분배도 일종의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세대 사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에 있어서와 같이 서로간에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 세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

무지의 장막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정의의 원칙을 세대 사이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선행세대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버이들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에 대해 어느정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주목해봄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자식과 손자 세대들을 위해 어느정도 저축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역시 무지의 베일속에서 "아무도 자기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까닭에 각 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채택된 원칙은 공정한 조정을 나타내게 된다." (민주주의로 풀 수 없는 것을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으로 푼다.)

롤스는 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미래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앞에 오거나 뒤에 온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세대들을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그것이 단지 시간상으로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래의 더 큰 선보다 현재의 더 작은 선을 택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을 만든다.

- 특히 불평등과 세대의 문제에 관해 영국의 석학 앤서니 앳킨슨은 세대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면 ‘기회의 불평등’ 뿐 아니라 ‘결과적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오늘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일 경기의 산전적인 조건이 된다. 오늘 결과적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내일 자녀들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물려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짐에 따라 불평등한 기회와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염려는 더 커졌다. 집안 배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배경과 성장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집안 배경 자체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 세대가 지닌 불평등은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불평등의 원천이다. 우리가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을 걱정한다면 오늘의 결과적 불평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sup>7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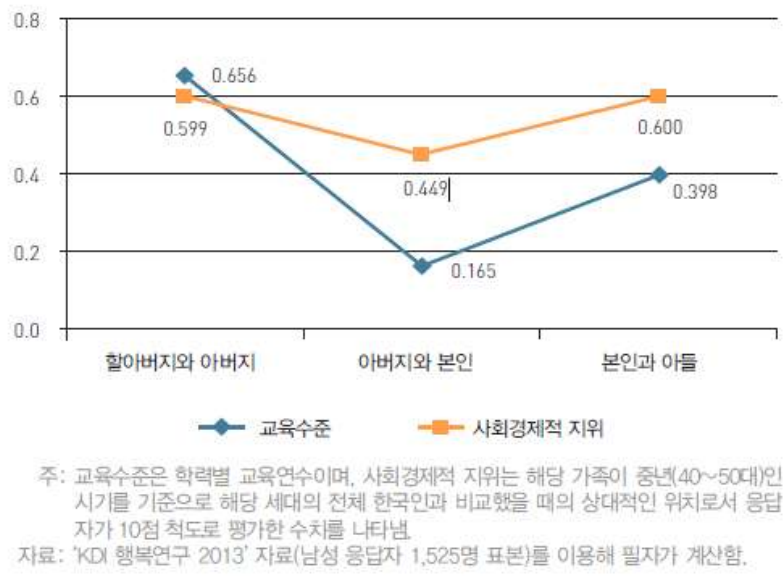


그림 4-19: 부와 교육의 대물림 추이(KDI 2015)

75) 앤서니 앳킨슨(2015), 『불평등을 넘어』, 글항아리, 27쪽

- 이미 우리사회는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면서 사회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부모들 교육과 경제적 지위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낮아졌지만, 자신들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위의 표)<sup>76)</sup>
- 우리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과 부, 국가의 재정과 복지자원, 그리고 환경자원에 대해 세대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으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그런 차원에서 진정하게 ‘세대 사이의 협력’을 모색해야 함.

	-2000	-1000	-5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500	1600	1700	1800	1850	1900	1950	1975	2000
인구(백만명)	27	50	100	150	170	190	190	200	220	265	360	350	425	545	610	900	1,200	1,625	2,516	4,079	6,272
GDP/Capita(달러)	112	127	137	113	109	98	97	104	116	133	104	128	138	141	164	195	300	679	1,622	3,714	6,539

표 4-2: 인류역사에서 인구증가와 성장률 증가의 장기 추세(출처: <http://www.bradford-delong.com/2014/05/estimates-of-world-gdp-one-million-bc-present-1998-my-view-as-of-1998-the-honest-broker-for-the-week-of-may-24-201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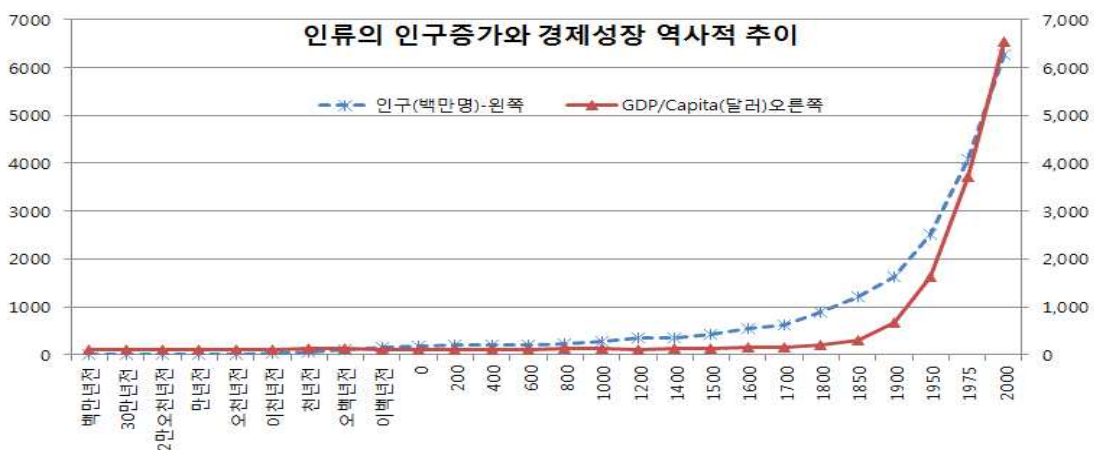


그림 4-20 :인류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역사적 추세

76) 김희삼(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 세대에 걸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경제침체 속에서 성장인가 생태 환경보호인가 하는 전통적 대립구도의 딜레마에 간혀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Anyone who believes exponential growth can go on forever in a finite world is either a madman or an economist)”라고 예언한 선구적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경고가 지금도 의연히 중요하는 것임. 이는 인류역사 전체에 걸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역사적 변화를 보아도 명확한 것임.
- 물론 “경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더해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 또한 절박한 과제다.”<sup>77)</sup>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탄소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방안은 효과가 매우 크다. 저탄소 세상을 향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투자가 향후 50년간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 이런 부분은 노동집약도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주요 투자 영역으로 “건물 개량, 대량 운송 철도, 지능형 전력망, 풍력과 태양력, 차세대 바이오 연료”등임.
- 특히 “투자의 목표 또한 분명히 변화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점점 더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은 여전히 꼭 필요하겠지만 그 목표를 더욱 신중하게 지속가능성에 맞추어야

77)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32쪽

한다. 특히 투자의 초점이 자원 생산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기술, 녹색 산업, 기후 적응성 향상과 생태계 강화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sup>78)</sup>

### 회복력(Resilience)

최근 기후변화나 생태는 물론 도시재생, 경제위기와 연계지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하여 팀 잭슨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언만 확인해 두도록 하자.

“회복력은 사람들의 생활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분배를 확실히 실행하며, 자원 처리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183)

\* 출처: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183쪽

---

78) 팀 잭슨(2009), 179쪽